

연구노트

- 녹색성장, 그린코리아 2010 국제학술회의
유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장)
- 아태개발협력포럼 : 개발과 젠더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정보팀장)
-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김 경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녹색성장, 그린코리아 2010 국제학술회의

유 희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장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한 『녹색성장 국제학술회의 그린코리아 2010』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UN 경제사회국(UN-DESA) 공동으로 2010년 9월 9일 ~ 10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의 핵심 정책기조로 채택된 후 2009년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발표되어 녹색성장이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국측에서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사주강(SHA Zukang) UN-DESA 사무차장, 드후스(Aart DE GEUS) OECD 사무차장, 타판(Arjun THAPAN)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특별고문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였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특징은 ‘세계 녹색성장 전략 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14개 국책 연구기관과 해외 전문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국내 녹색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위상을 증진함과 동시에 세계 녹색성장을 주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국제학술회의는 ‘세계 녹색성장 강화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과 협력’이 중심테마였으며, 이를 위해 첫째,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정책, 둘째,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셋째, 녹색성장과 도시·교통 미래전략, 넷째,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농업 시스템 구축 전략, 다섯째, 녹색성장과 국제협력, 여섯째,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 등 총 아홉 개 세션이 진행되어 다양한 정책 비전과 세부추진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아홉 번째 세션이었던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사회 형성’ 세션에서는 녹색생활 관련 국내 전국조사와, 국제 비교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녹색사회(Green Society) 구축을 위한 녹색생활(Green Living) 실태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세 명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과 녹색생활 실천 현황’에 대한 국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과 여성 3,500명이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 국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녹



색생활 실천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녹색성장이란 세계적 트렌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정책이며,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성장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 사이에 녹색성장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낮아 아직까지는 녹색성장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녹색생활 실천이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도록 실효성 있고 실제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 녹색생활 실천 수준은 항목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절약, 물 절약, 음식물 절약 실천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녹색생활 실천 역시 잘 실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녹색생활 실천은 녹색생활의 습관화는 물론 지구 환경보호와 어린이 환경교육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녹색생활 실천 운동은 녹색이동생활, 녹색여가생활, 녹색보육 등 다른 녹색생활 영역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절약상품을 구입하는 녹색생활 실천은 에너지절약과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녹색생활 실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실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기술 · 산업 분야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녹색소비자로서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기후변화 인식과 녹색성장 인식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성은 여성이 높았고, 녹색성장과 관련한 미디어 시청은 남성이 높았다. 또한 녹색생활 실천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녹색성장 인식, 녹색생활 실천 의식,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 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가장 낮았다. 세계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녹색 Tiger가 되기 위해서라도 20대를 겨냥한 홍보, 교육, 의식과 행동 전환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지별로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인식은 군읍면 지역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에서 높았다. 그러나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은 군읍면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녹색생활 실천은 중소도시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상품을 구입하는 녹색생활 실천은 중소도시지역이 각각 상대적으로 참여가 높았다. 2013년까지 약 107조원의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이 대도시에 투자되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한 정책실패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균형투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학력별, 소득별로는 고학력자와 상위 소득자들에게서 녹색생활 실천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학력자 상위 소득자들의 녹색성장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반면 저학력자와 하위 소득자들은 녹색생활 실천의식과 실천 수준이 모두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학력자와 하위 소득자들의 녹색성장 인식 수준은 고학력자나 상위소득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사회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모두 녹색성장 의식과 녹색생활 실천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메우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과실 중 하나인 사회발전, 즉 사회적 통합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고학력 상위소득 집단의 녹색생활 실천 증진을 위해 보다 정교한 정책 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발표였던 ‘지구온난화의 여섯 부류의 미국인 집단과 세계 대중’은 미국 엔씨니레이저로워츠박사가 발표하였다(Anthony Leiserowitz, Ph. D, Yale University).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의 에너지 이용이나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미국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도시와 카운티, 그리고 주와 연방정부 모두의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문제는 미국대중에게는 최우선의 선결문제는 아닌 듯 하였다. 현재 미국인들은 기후변화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당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기후변화는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잠재적 위협요소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여섯 부류의 미국인 집단(Global Warming's Six Americas)’을 식별해내는 것이었다.

여섯 부류의 미국인 집단은 미국 대중들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각각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여섯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2008년 가을에 시행된 미국 성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전국 설문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설문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존 행태, 소비자 행태, 그리고 정치 행태 등을 포함하는 미국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 태도, 정책선호, 행동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미국인들의 새로운 가치나 태도에 대한 신념, 민간 참여, 대중매체의 이용,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조사하였다.

‘여섯 부류의 미국인 집단’ 연구는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예일대학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의해 전 세계 국민을 상대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전 세계 대중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조명해 보는 것이었다.

2008년 9월과 10월 사이에 2,164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설문이 실시되었던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관련 설문내용은 1) 문제의 우선순위(Issue priorities), 2)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s), 3) 환경보호 행동의 동기(Reasons for and against action), 4) 정치/소비자 행동주의(Political and consumer activism), 5) 믿음(Believes), 6) 위협에 대한 인식(Risk perception), 7) 정보에 대한 열망(Desire for more information), 8) 가스배출 축소 성취가능성(Achievability of emission reductions), 9) 정보전달자에 대한 신뢰(Trust in different messengers)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분석을 통해 여섯 부류의 미국 성인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집단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관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정부가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 분류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은 미국 성인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작은 집단은 7%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여섯 부류의 집단은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이나 행동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여 준다. 여섯 집단은 불안집단(Alarmed: 전체 성인 인구의 18%), 우려집단(Concerned: 전체 성인 인구의 33%), 주의집단(Cautious: 전체 성인 인구의 19%), 무관심 집단(Disengaged: 전체 성인 인구의 12%), 의심 집단(Doubtful: 전체 성인 인구의 11%), 거부집단(Dismissive: 전체 성인 인구의 7%)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약하면 전 세계적으로 5명 중 2명은 기후변화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데, 이러한 수치는 최빈국들이나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서 5명 중 4명은 기초적인 지식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지식이 높은 국가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기후변화가 자신들과 그들의 생활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여섯 집단의 미국인들(Global warming and Six Americas)’의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이 각국의 국민들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이나 결과 그리고 잠정적인 해결책에 대한 정보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정책대상 집단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대상 집단의 특성을 이해 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일반대중의 행태나 생활습관을 좀더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발표는 ‘가계 소비행태와 환경정책에 대한 OECD 설문결과’로 이루어졌다(Yse Serret, OECD 환경국).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비 유형이나 행태는 천연자원의 비축, 환경의 질,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양한 예측자료들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적 영향은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08). 경제성장은 가계소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그 상대적인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2030년경 82억 명이 되는 지구촌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화나 생활양식의 변화 또한 가계소비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 있다. 동 논문의 설문은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OECD 국가 10개국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그 분석은 몇몇 설문참여 국가들의 경험 있는 연구팀들의 도움을 받아 OECD 환경국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국의 정부들에 의해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가계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수단들에는 에너지관련 세금, 상수도 가격 구조 등과 같은 경제적인 도구들, 인증마크나 홍보 캠페인, 그리고 가전제품들에 대한 기술표준 규정 등의 직접적인 규제, 재활용 체계나 대중교통 수단과 같은 환경관

련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입, 연령, 가구의 규모, 교육수준 등에 따른 개인이나 가계의 환경적 행태의 차이와 개개인의 환경에 대한 태도나 규범의 효과 또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가구의 환경과 관련된 행태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재검토하고, 두 번째로 앞서 언급된 5개 분야에서의 2008년 OECD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포괄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가계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들로는 경제적 · 인구통계학적 변수, 환경 정책 선행조건, 규범과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요 설문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5개 분야로 정리되었다.

첫째, 물과 관련하여 물소비 효율적인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 물 절약 행위의 선택; 물 소비수준의 결정요인 등; 개선된 물의 품질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 에너지 절약 행위의 선택; 재생에너지 사용 결정;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고체 폐기물 생성; 재활용 노력; 쓰레기 방지; 재활용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개인 교통수단에서는 교통수단의 선택;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 자가용 소유,

다섯째, 유기농 식품과 관련해서는 유기농 식품 소비수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 미국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등은 모두 아직까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의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인구학적 변인, 국가정책의 추진방향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 실제적 생활실천과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처하고 이를 녹색성장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본 세미나에서 도출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세부적인 정책실천 수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린코리아 2010 국제회의 개최(2010. 9. 9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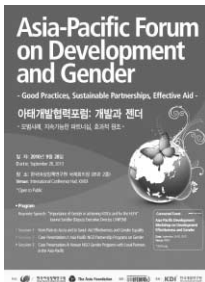
-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UN경제사회국(UN-DESA)와 공동으로 “세계녹색성장 전략강화와 녹색경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 13개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 동 회의에는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세원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사주강 UN-DESA사무차장, 드후스 OECD사무차장, 타판 아시아개발은행총재 고문 등이 참석했다.

아태개발협력포럼 : 개발과 젠더

- 모범사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효과적 원조 (2010. 9. 28.) -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정보팀장



- 일시 : 2010. 9. 28. (화) 09:00 ~ 17:30
-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 협력 : UNIFEM
- 후원 : 한국개발연구원(KWDI)

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정보팀은 2009년에 이어 “2010 아태개발협력 포럼: 개발과 젠더”를 개최한다. 본원은 매년 여러 아태지역 국가의 젠더 관련 기관 및 여성정책기관의 방문 요청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대표적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본원의 아태지역에서의 인지도에 걸맞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아왔다. 또한 2009년 제 1회 아태포럼 (2009. 11. 25) 및 국제개발협력연찬회(2009. 12. 8)를 통해서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국내 NGO들의 요청 및 의견을 통해 성인지적 사업의 발굴, 개발, 실행 및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한국정부는 2010년 OECD/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위치가 변화되었고, 신흥 공여국으로서 몇가지 과제를 안고있다. 원조의 효과성 제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파트너십 구축, 성평등 지침에 근거한 젠더분야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확대해야하는 것이 그 과제들이다.

한국의 ODA, 나아가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OECD/DAC이 개발원조에서의 젠더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고, 이를 성평등지침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발협력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새천년개발계획(MDGs)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OECD/DAC의 성평등지침서에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MDGs의 세 번째 목표와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성평등과 원조효과성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새천년개발계획(MDGs)으로



요약이 되어있는 국제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여러 범 지구적 문제들은 여성역량강화 및 성주류화를 통한 문제의 인식이 없이는 해결 될 수 없는 이슈들이다. 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및 성인지적 관점의 적극적 도입은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자 목표이다.

개발사업에 있어서 젠더분야 사업의 확대와 NGO와의 파트너십을 위해, 2010년 아태포럼에서는 ‘아태개발협력포럼 : 개발과 젠더’라는 커다란 주제하에 ‘모범사례,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효과적 원조’라는 주제를 부제로 하였다. 이 주제하에 양자와 다자기구의 개발원조사례에 있어서 성평등문제, 그리고 국내 개발NGO와 아태지역의 로컬NGO들의 ODA사업 과정에 나타난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내용과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9월 28일 국제포럼을 준비하였다. 특히 이번 아태포럼의 기조강연은 UNIFEM 부사무총장인 Joanne Sandler가 맡았으며, 개발이슈에 있어서 젠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태포럼 주요내용

기조강연: 새천년개발목표 달성과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HLF-4)에서의 젠더의 중요성

제1세션 : 파리에서 아크라로, 그리고 서울로: 개발협력사업, 원조효과성 그리고 성평등

제2세션 : 사례발표I, 젠더에 관한 아태지역 NGO 파트너십 프로그램

제3세션 : 사례발표II, 한국 NGO와 현지 파트너의 아태지역 프로그램

제1세션에서는 영국 국제개발부 네팔사무소(DFID/Nepal), 아시아개발은행 인도네시아사무소(ADB/Indonesia),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표를 하고 국내 정부부처 국장급과 한국해외단체원조협의회에서 각각 정부와 NGO의 입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세션과 제3세션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거리아동 지원사업, 여성교육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아태개발협력포럼은 개발협력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실무자, 의사결정자, 그리고 관심있는 학생 및 일반인들이 아태지역의 개발 및 발전의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협력하는 아태지역을 꿈꾸기 위한 장이 되었다. 동시에 연구와 사업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지난 27년간 축적된 본원의 경험과 지식을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에서의 젠더 및 여성문제를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한국이 아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젠더 부분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립 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아태포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출범하는 UN WOMEN의 핵심 기관인 UNIFEM과의 MOU를 체결하였다. KWDI의 개원 27년 만에 유엔기구와 맺는 첫 MOU이며, 이를 통해 KWDI는 국제사회에서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례행사인 아태개발협력 포럼이 2010년 UNIFEM과의 MOU를 통해, 개발과 젠더에 대한 아태지역의 주목을 받을것이며, 이번 MOU를 통해 UNIFEM의 성인지 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아태개발워크샵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김 경 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행사개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10년 9월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성주류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주제발표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정경학부 학장인 주디스 스콰이어스(Judith Squires) 교수의 「영국의 성 주류화 실행과 성과」, 캐나다 여성지위청 성 분석국의 헬렌 드와이어 리나우드(Helen Dwyer-Renaud)국장의 「캐나다 성 분석의 추진체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희 박사의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와 젠더 거버넌스」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발표 논문에 대해 허라금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재인 국장(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신혜수 대표(유엔인권정책센터)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캐나다, 영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여성정책과 글로벌 페미니즘의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과를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 성별영향평가 발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2. 발표논문 요약

■ 제1발표

영국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실행과 성과

Judith Squires (University of Bristol)

이 논문은 영국에서의 성 주류화 관행의 발전양상을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성 주류화의 의제설정이라는 초기 공약에서부터 2006년 성평등 의무(gender equality duty)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통합주의적 주류화까지를 폭넓게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 평등만을 다루는 사회기반구조 및 절차로부터 떨어져 성 평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평등체계로 나아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성 주류화의 근본적인 잠재력은 실현되고 있는가? 여성주의자들이 초기에 인지했던 것과 같은 이론적 잠재력이 달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영국에서의 경험은 법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성평등 지지자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성평등 사회기반시설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해주며 궁극적으로 정책과정을 통해 성평등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주류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이 평등정책의 핵심목표로 인식되거나 아니면 다른 불평등 영역에 포함되어 비주류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 논쟁 중이다. 정당, 성평등 전문가들 그리고 법적 평등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는 외부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제2발표

캐나다 성 분석의 추진체계 : 성과와 과제

Helen Dwyer-Renaud (Status of Women, 캐나다)

캐나다의 성 분석(Gender Based Analysis :GBA)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한 국가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성 분석을 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 최근에 캐나다 정부는 의회의 감사원(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Canada)에서 행해진 감사결과에 따라 성분석(Gender Based Analysis: GBA)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화하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의지는 성분석 이행계획 (GBA Action Plan)의 도입으로 실행방식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다. 이 이행계획(Action Plan)의 실행은 책임성 강화, GBA의 실행 강화, 조직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향상, 양성평등을 위한 가시적 결과의 표출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는 성분석 이행계획이 목표하는 핵심요소, 핵심 주체의 역할과 책임, 기대효과 등을 다룬다.

■ 제3발표

한국의 성별영향평가와 젠더 거버넌스

김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도구로서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과 함께 2000년 이후에 제도화되었다. 한국은 안정적인 제도화에 기초하여 정부주도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성 주류화 관련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전략이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행주체가 공무원 뿐 아니라 젠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실행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협력체계를 구

축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성 주류화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젠더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한다. 또한 한국이 지난 5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면서 만들어낸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성별영향평가는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제도화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담당 공무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가 지역개발분야, 교통 분야 등 다양해지면서 일반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넷째,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 안내서 등의 시행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분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다섯째,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 기관이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이다. 여섯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제도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몇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효율적 관리와 지표개선,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의 개선과 중앙기관 공무원의 교육확대,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위한 제도개선과 젠더 거버넌스의 실천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